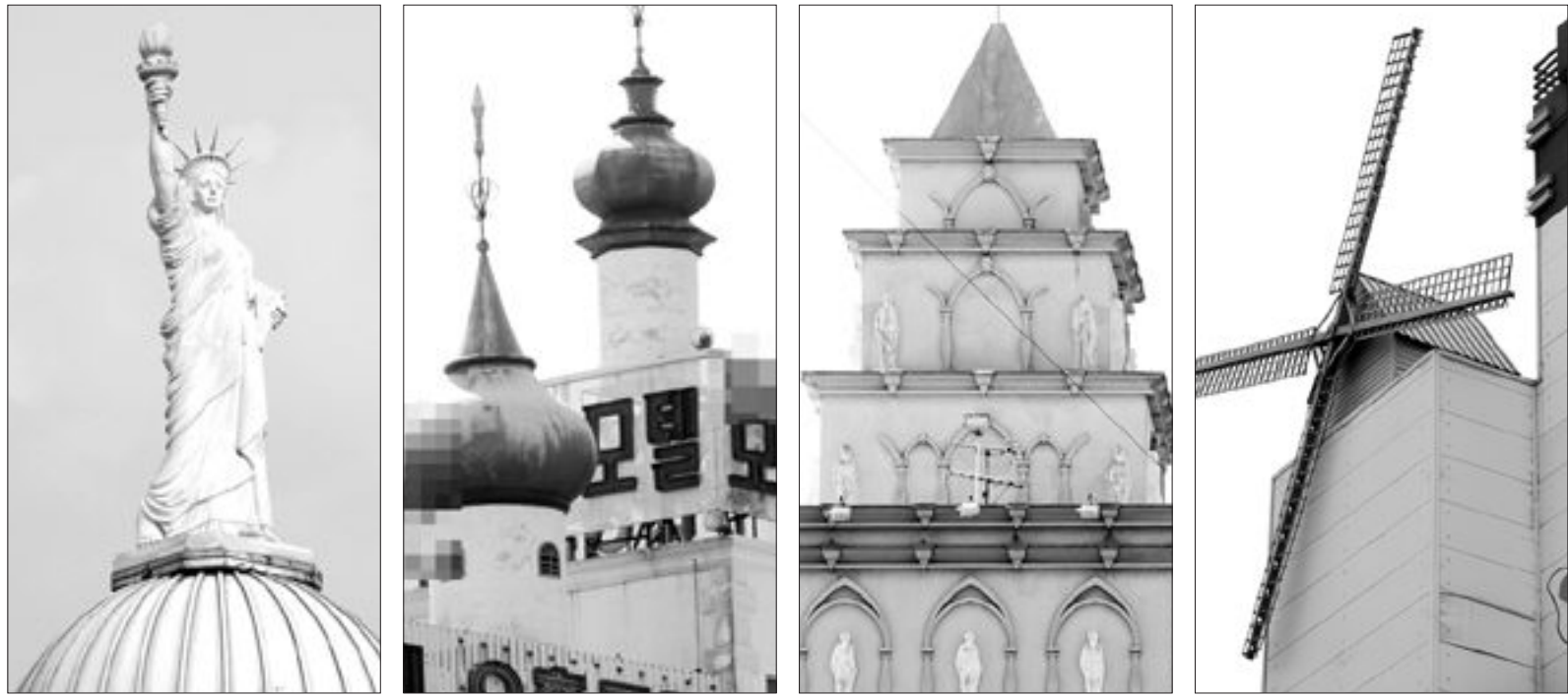


사회



광주 하늘 뒤덮은 자유여신상·헤라클레스·풍차...

모텔 장식물 경관 망친다

광주 숙박업소 1천 곳 경쟁적 설치 붕괴·추락 등 안전사고도 큰 위험

최근 광주지역에 지어진 모텔의 각종 장식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다 일부 모텔 대형 장식물의 경우 뼈대도 없이 지어져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유여신상·헤라클레스·원형 기둥·탑·종자 등 대형 장식물이 설치돼 있다. 이들 장식물의 경우 철관 구조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철근 등 뼈대 없이 돌·벽돌·콘크리트블록만 쌓아 올려 만든 것이 많아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으로 벽돌 수백 장이 떨어졌다. 다행히 추락지점 주변에 차나 행인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으나 이 일대 소동이 1시간여 동안 통제됐다. 특히 서구 상무지구·광산구 첨단지구 등에 들어선 모텔의 경우 아무런 디자인 개념 없이 대형 장식물이 설치돼 도시 미관과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도(건축물 높이, 각 층 높이 등) 등을 첨부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다보니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건물 옥상이나 외벽에 설치된 대형 장식물에 대한 규제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간부 공무원 전임지서 40억대 사업권 거래 개입 의혹

전남도 간부 공무원이 전임지에서 40억원에 달하는 사업자간 사업권(사업 시행자 지정)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어 발령을 받고 있다.

2007년 10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광양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전남도 모 사업소장 K씨가 조선해양 측에 해당 부지와는 무관한 땅에 설정된 사업권을 사라고 종용해 40억원 을 주고 샀다는 것이다.

당 토지에 대해 당시 T사가 사업을 하려고 지정을 권리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조선해양 측은 당시 T사 측 과 광양시청 직원 2명이 입회한 가운데 40억원에 문제의 사업권을 매수한 다는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 K씨는 "회사가 부도가 나자 모든 잘못을 나에게 돌리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사업권 문제도 조선해양 측이 사업권 소유자를 소개해달라고 통사정을 해 연결해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찰 비리 심각

금품수수 징계 14명...수도권 제외 최다

1년6개월간...뇌물 1억 넘어

광주경찰이 최근 1년6개월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가 서울·경기경찰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광주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4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서울경찰청(87명)과 경기경찰청(43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총 뇌물액수는 1억9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광주청은 지방청별 정원을 감안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위 경찰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

경찰의 정원은 2천800여명으로, 전국 경찰관(9만9천554명)의 2.8% 수준이다.

광주의 비위 경찰관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불법 오락실 등 유흥업소와의 유착 관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는 지난 1월 사행성 오락실 비호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경찰간부 3명이 구속되는 등 경찰관 5명이 오락실 관련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았다.

전남경찰도 지난 6월 A총경이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 받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남청은 지난해 이후 4명의 경찰관이 3천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7926) 김장두



교통단속 경찰차 교통위반 688건

광주·전남 최근 5년간 3,760만원 과태료 부과

신호·속도위반 등으로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경찰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가 700건에 육박해 교통법규 단속주체인 경찰의 법규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부터 올 8월까지 광주·전남 경찰차량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688건(3천76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 경찰의 과태료 건수(5천845건)의 11.8%로, 업무 중 불가피한 법규위반 건수를 포함할 경우 경찰의 실제 위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 경찰차량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5년 621건, 2007년 1천171건, 2009년 8월 1천79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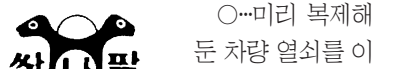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사 현장 154차례 갈취

사이버기차 지역형 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3일 공사 현장의 사소한 잘못 등을 트집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환경전문기자 기차(5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지난해 9월 완도의 한 부두 공사현장에서 페르크리트 보관 등 잘못을 트집잡아 1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총 154차례에 걸쳐 4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간 큰 60대 노점상 車 통째로 훔쳐



○미리 복제해 둔 차량 열쇠를 이용해 과일 노점상의 화물차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간 큰' 60대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노점상의 화물차를 훔친 김모(61)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김씨는 지난 2월 4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도로에서 사파 70박스화와 현금 280만원이 실린 이모(63)씨의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

○김씨는 "생계가 곤란한데다 때 마침 복제해 둔 열쇠가 주머니에 들어 있어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

'김우철·이철 형제 간첩 사건' 34년 만에 재심

광주고법, 고문으로 자백

군사독재 시절 경찰에 불법 연행된 뒤 간첩으로 몰려 온갖 고초를 당한 '김우철·이철 형제 간첩 사건'에 대해 법원이 34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3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고(故) 김우철·이철 형제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

우철씨는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재일교포 사업가로 58세 때인 1975년 2월 고향인 강진을 찾았다가 지인의 거짓 신고로 인해 동생 이철(당시 51세)씨와 함께 경찰에 불법연행된 뒤 간첩으로 몰렸다.

이들은 법원에서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철씨는 징역 10년, 이철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만기 복역 후 출소했으며, 각각 1992년, 2002년 숨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a 'National Day' event, featuring a large illustration of a person holding a large object, possibly a gift or award, and text promoting a 'National Day' celebration with various activities and prizes.